HANKYOREH MEDIA GROUP

# 2013 한겨레신문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 이행보고서

2014. 09

Contents

1. 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2. 한겨레신문사 소개

3. 한눈에 보는 2013년 한겨레

4. 유엔글로벌콤팩트 분야별 10대원칙

5. 10대원칙 이행내용_인권

6. 10대원칙 이행내용_노동

7. 10대원칙 이행내용_환경

8. 10대원칙 이행내용_반부패

한겨레 3.1절 마라톤 대회
소비자와 함께 뽑는
한겨레 광고대상
Hosted by 한겨레

# 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한겨레신문사는 1987년 창립되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 언론을 표방하고,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온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으며, 다섯 번째로 '2013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며, 사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환경보호',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세부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위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탱크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책임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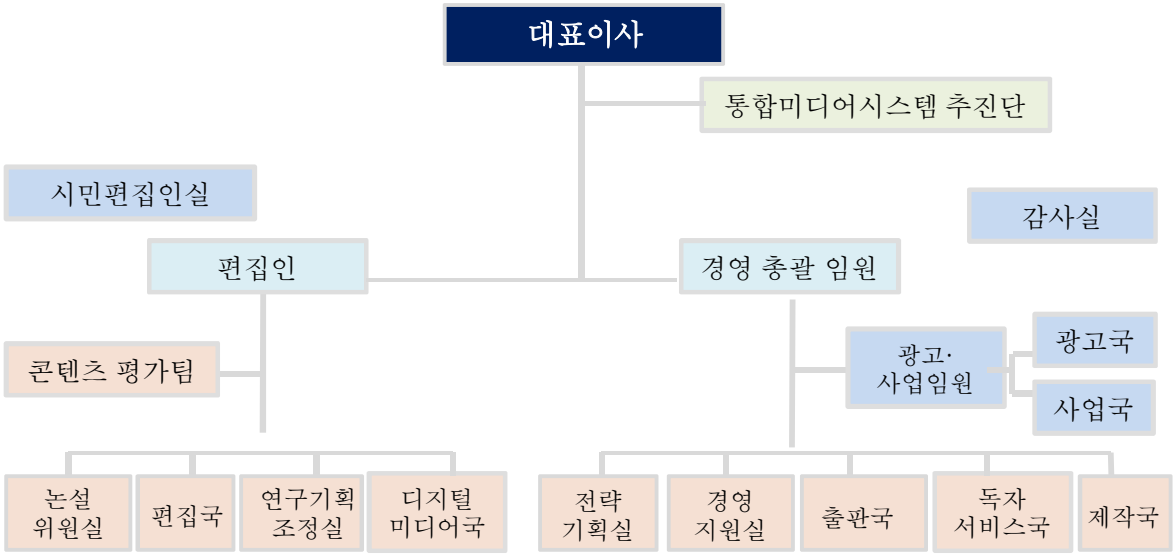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정영무

정 영 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 한겨레신문사 소개

한겨레신문사는 한국 민주화의 결실로 1987년 12월 창립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권력에서 독립된 자유언론을 바라는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어 설립한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종합일간지 <한겨레>를 포함해 주간지<한겨레21>, <씨네21>, 월간지<이코노미인사이트>, 인터넷한겨레, 웹방송하니TV등 다양한 매체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업 체 명 | 한겨레신문(주) | |
|---|---|---|
| 사업 영역 |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br>• 서적 및 출판인쇄<br>•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br>• 광고 제작 및 판매<br>• 교육 서비스 | • 오락, 문화 및 스포츠<br>▪ 방송채널사용<br>▪ 부가통신사용<br>▪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 제공 |
| 임직원 수 | 585명 | |
| UNGC 가입일 | 2007년 8월 | |
| CoP 발간 | 2010년 ~ 2013년 |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
| 연 락 처 | 1566-9595 | |

# 한눈에 보는 2013년 한겨레

## 인권

- 2013년 11월 제 1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 개발 사업 진행
- 여성, 이주 노동자, 아동 노동 관련 기사 보도

## 노동

- 사내 학습조직 지원 및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년 대비 직원 교육비 57% 확대
-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교육 개발
- 노동조합, 비정규직,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등 노동 이슈 보도

## 환경

- 적극적인 자원 및 에너지 절약으로 가스, 물, 전기 등 전년대비 자원 사용률 대폭 절감 달성
- 에너지 절감 캠페인 후원, 기후 대응 및 환경보호 관련 보도 활동 진행

## 반부패

- 윤리경영 정착 위한 윤리위원회, 이사회, 정기 주주총회 운영
-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는 '2013 동아시아 30'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장려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인권**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환경**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인권**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1. 임직원 권리 존중

• 한겨레신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적으로 선언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 단체협약 제 5장 46조를 통해 임직원 권리를 명시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2. 인권 증진 연구 사업

• 한겨레신문사에 소속된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가 주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후원하는 아동친화경영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국제원칙을 소개하고 아동친화경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는 국내기업의 아동친화경영의 이해를 넓히고 한국 사회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인권 | 노동 | 환경 | 반부패

**인권**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3. 인권 관련 보도활동

- 한겨레신문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 10% 성폭력 피해(2013.04.28)'

여성이주노동자 10% 성폭력 피해

강간·신체접촉·성매매 요구 순
가해자 70~80%가 사장·관리자
'불법체류 신고하겠다' 협박에
피해사실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

지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20대 여성 보파(가명)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였다. 경남 지역 한 농장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꿈은 악몽이 됐다. 농장주는 회식 자리를 마련한 뒤, 한국 음식이 낯선 보파에게만 "차에 가 있으라"고 했다. 이윽고 농장주는 보파를 찾아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보파의 거부로 농장주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농장주는 집요했다. 다음날 새벽 농장주는 보파가 잠든 기숙사까지 찾아 '잠자리'를 요구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더는 농장에 머물 수 없게 된 보파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옮겨야 했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1%에 해당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덫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최악의 인권 유

31.6%, 성매매를 요구한 경우가 21.1%였다. 가해자(복수응답)는 대부분 사장(80%)이나 관리자(70%)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노동자의 68.2%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가 드러날 경우 좁은 이주민 사회에서 발붙이기도 어렵다. 가해 남성들은 이런 처지를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피해 여성의 58.3%는 성폭력 피해 이전에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등 금전적인 협박(16.7%)도 자주 당했다.

사업주들을 신고해도 정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불안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중국인 종업원 ㅇ(35)씨에 대한 성폭행·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전아무개(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가 ㅇ씨를 7차례 성폭행·추행했다고 보고 7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여대 경비·청소노동자 '인권은 없다'(2013.11.13)'

물 마신다고 폭언…거울 본다고 면박

서울여대 경비·청소 노동자 '인권은 없다'

"오줌 자주 싸니까 물 마시지 마라
하루 쉬려면 업체에 10만원 내라"
관리자가 청소·경비직 '인권유린'
노조 결성 움직임에 별도 설립도

서울여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양아무개(59)씨는 지난여름 근무 중 목이 말라 경비실에서 물을 얻어 마셨다가 말 못할 폭언을 들었다. 양씨가 속한 청소·경비 용역업체 ㅅ사의 김아무개(55) 소장은 "늙어 처먹어서, 나 목 잘리게 할일 있냐. 당신 같은 사람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줄을 섰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후로 양씨는 수돗물만 마신다.

다른 여성 직원들도 "오줌을 자주 싸니까 물 마시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항의를 하면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야지, 친정에서 하던 대로 하자면 되겠느냐"라는 면박이 돌아왔다. 청소 일을 하는 이아무개(53·여)씨는 "지난달 소장이 한 건물의 입간판을 닦고 있기에 왜 직접 하느냐고 물었더니 'ㅈ 큰 놈이 ㅈ 흔들 듯 청소한다'고 답하더라.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봄 단체 산행에서는 김 소장이 다리를 저는 60대 여성 직원의 흉내를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 이아무개(52·여)씨는 "눈을 뜨고 못 볼 만큼 비참한 광경이었다. 소장이 사원들의 신체적 약점을 그렇게 놀려도 되나"라며 혀를 찼다.

서울여대의 경비·청소 하청업체인 ㅅ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들은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폭력적 발언, 해고 협박 등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심지어 동료를 고자질하면 특근 배치 등의 보상을 주는 등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감시도 이뤄졌다. 김 소장은 지난 9월 직원 조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고 머리 만지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청소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법'도 노동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특히 경비직에게는 단 하루의 휴일도 허락되지 않았고, 하루를 쉬려면 10만원을 업체에 내야 했다.

경비조 반장으로 근무하는 이아무개(56)씨는 노동자들로부터 회식비를 각출하게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을 열었고, 불참자에겐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업체에선 매년 3월 이뤄지는 재계약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찍어 눌렀다. 재계약 전날 근무복을 걷어 각각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두고, 다음날 출근해 자신의 봉투가 없으면 해고였다. 경비 일을 하는 윤아무개(55)씨는 "3월 잠을 못자고 새벽 4시에 나왔다. 다행히 나는 살았지만 3명의 봉투가 없었다. 참담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돈을 내야 휴일을 준다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종에 따라 월 116만~134만원을 받는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업체 쪽 관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별도 노조를 결성해 신고 절차를 마쳤다. 업체의 허아무개(64·여) 전 부소장이 가입 원서를 들고 다니며 조합원 60여명을 모아 노조위원장이 됐다. 20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의 자발적 노동조합은 13일 출범식을 연다.

ㅅ사 쪽에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에서 위장취업한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업체의 잘못이 파악되면 학교에서도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호균 서영지 기자 uknow@hani.co.kr

한국은 '아동노동'과 무관? 과연 그럴까

국내기업 125곳에 '원칙' 적용해보니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아동에 직간접적 영향 주는
다양한 활동 하지만
여전히 기업과 아동은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
몇개월씩 고된 현장실습
정례화되어가는 현실
새로운 관점서 접근 필요

18살 미만의 아동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구의 절반에 이르기도 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은 직간접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동은 미래의 근로자, 소비자로서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2012년 1월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유엔아동기금인 유니세프는 기업의 모든 활동과 영역에서 아동이 고려될 수 있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서 아동이란 대체로 만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말한다. 원칙은 모두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포괄적 방향으로, 기업이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고, 아동권리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9개 원칙에서는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작업장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 △환경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등 네 영역에서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14~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아동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열었다. 이렇게 기업경영에서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세계 추세에 맞춰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국내 기업에 적용해 현황을 점검해 봤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

해야 한다.
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교육, 보호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들의 일자리의 질도 고려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 근로자의 수유시간에 유급을 인정한다거나,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2시간씩 휴가를 낼 수 있는 기업도 있었다. 복귀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평가 때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한 기업도 있었다.

임직원 자녀의 재능 개발과 진로 컨설팅 등의 행사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성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히 관심을 쏟도록 한다.

아동노동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이를 금지한다는 선언적 공표는 있으나 구체적 활동을 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내 기업들은 아동노동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몇달씩 실습을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가는 현실이어서, 아동노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또 시장에서 기업

들이 주변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및 토지 등(원칙 7)은 아동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아동권리와 밀접하다. 조사 대상인 125곳의 80%가 넘는 기업은 각자의 환경경영 체제를 수립하거나 의지를 외부에 표명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나무 심기,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 교육 등으로 아동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업들도 있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또 위험지역에서의 아동의 안전 보장(원칙 8), 자연재해 등의 위급상황에서 아동 권리 존중(원칙 9), 지역사회에서의 아동권리 발전을 위한 기업 노력(원칙 10)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아동들에게 문화·예술·경제·과학 교육을 진행하거나, 난치병 환아 혹은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많았다. 다양한 아동 관련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들이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준다.

조사 대상 기업 125곳은 대체로 작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복지(원칙 3), 환경(원칙 7),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향상(원칙 10)을 위한 사회공헌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해당 기

대포차 브로커 꾐에 노숙인들 벼랑

밥·술 사주고 용돈 주며 환심 산뒤
인감·등본 건네받아 대포차 개설
체납폭탄에 노숙인은 목숨 끊기도
인권단체 "사용자에 세금 부과를"

서울 서대문구의 고시원에서 사는 장덕수(가명·50)씨가 '그들'을 만난 건, 15년 전이다. 1998년 일자리를 잃고 종로2가에서 노숙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일자리 필요하지 않아요?" 남녀 한 쌍이 장씨에게 다가왔다. 햇볕이 뜨겁게 쏟아지던 7월이었다.

그들은 취업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6통씩을 요구했다. 장씨는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가 필요한 서류를 떼어 건넸다. 남자는 "차비나 하라"며 10만원을 쥐여줬다. 일자리를 소개받진 못했지만, '세상엔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5년 뒤 고시원에 둥지를 틀자, 우편물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 과태료 통지서였다. 노숙생활을 할 때는 주소가 없어 날아오지 않던 것들이었다. "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 날아온 줄로만 알았다"고 장씨는 말했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을 만나, 자신이 자동차 2대의 명의자란 사실과 15년 전에 만난 그들이 '대포차 브로커'들이었단 사실을 알게 됐다. 거저 얻은 '10만원'의 결과는 가혹했다. 지금까지 장씨 앞으로 밀린 각종 세금과 과태료 체납금은 4800여만원이다. 장씨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살던 최영훈(가명·51)씨는 대포차 브로커에게 자신의 명의를 내줬다가 2002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2명과 공모해 대포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최씨의 죄목이다. 그의 이름이 도용된 자동차는 3대였다. 그는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터였다. 감옥에서 10개월을 보내고 나서도 최씨에게는 자동차 할부금 5000여만원이 고스란히 남았다. 사기죄가 확정돼 파산신청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자신의 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탓에 금전을 미끼로 한 대포차 브로커들의 유혹에 취약하다. 특히 대포차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1일 "명의도용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명의도용 범죄에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돈이나 술 등으로 꾐에 빠져 불가피하게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등 노숙인 인권단체들은 이날 노숙인들의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번호판만 떼가는 서울시의 '대포차 근절 방안'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들이 세금·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세금과 과태료를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차를 사용하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한국은 '아동노동'과 무관? 과연 그럴까(2013.03.12)'　　'대포차 브로커 꾐에 노숙인들 벼랑 (2013.04.01)'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1.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위한 노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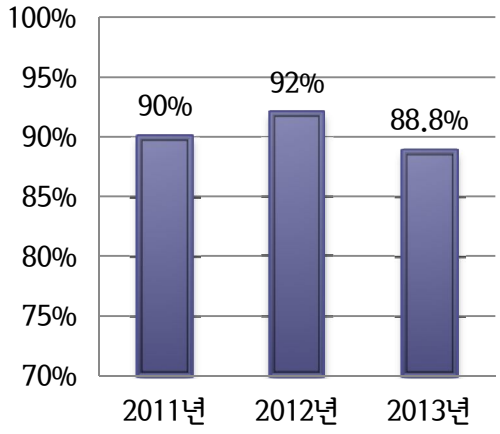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단체협약 제3조>에 근거, 전체 임직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대표, 대표이사 및 각 노사 동수로 대표자가 위촉한 직원들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발생 시에도 임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인센티브 지급, 경영진 선출제도 개선 등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 2. 노동조합 운영

• 한겨레신문사는 2013년에는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에 반대한 일부 노조원들의 탈퇴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88.8%의 가입율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율(%)**




| 구 분 | 2013년 |
|---|---|
|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수 (명) | 572 |
|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 508 |
| 노동조합 가입율 (%) | 88.8 |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한겨레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활 동 | 상세 내용 |
|---|---|
| 동아리 / 학술모임 지원 | 활동비 지원 |
| 여가 지원 | 여가비 일부 지원 |
| 생활자금대출 지원 | 대상자 선별을 통한 생활자금 저리 대출 |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 노조 사무실 공간 활용해 저렴한 가격의 음료 제공 |
| 근로자 쉼터 운영 | 건강, 휴식을 위한 안마기, 혈압기 등 비치해 운영 |

## 3. 임직원 차별 금지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성희롱예방지침> 등 차별금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내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사내 여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내 여성 권익 대표 조직 현황**

| 구 분 | 대 상 |
|---|---|
| 여성 사우회 | 한겨레 내 여성직원 |
| 여성기자회 | 한겨레 내 여성기자 |
| 한우리회 | 한겨레 내 경영관리직 여성직원 |

# 10대원칙 이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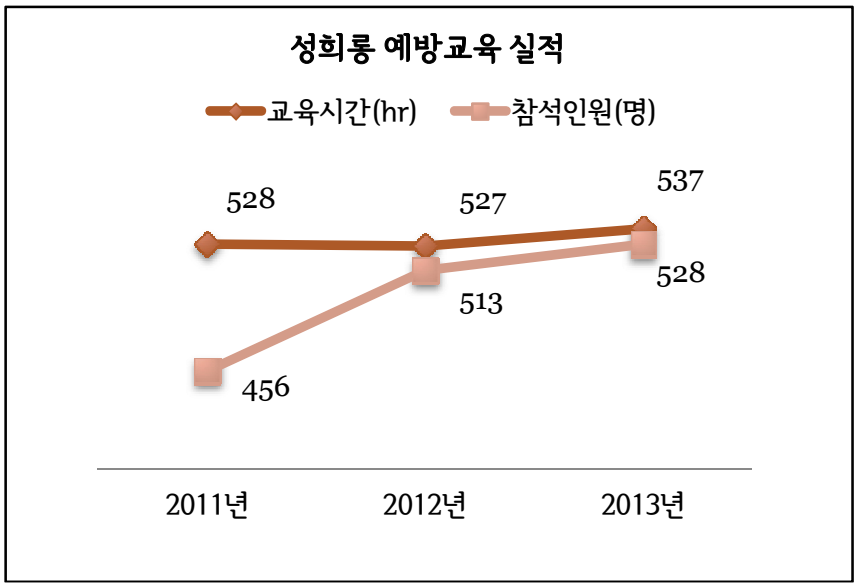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위원회 규정' 내 의의 제기 조항 및 징계 조항을 두어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4. 남녀 평등 가치 전파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남녀 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내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537시간 진행되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총 528명의 임직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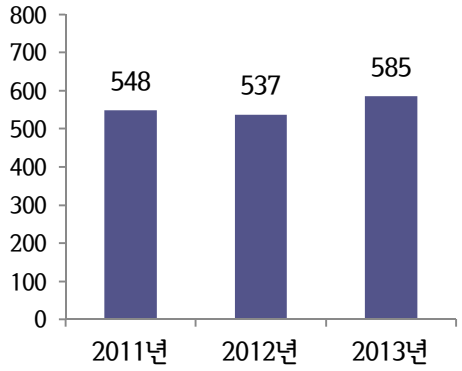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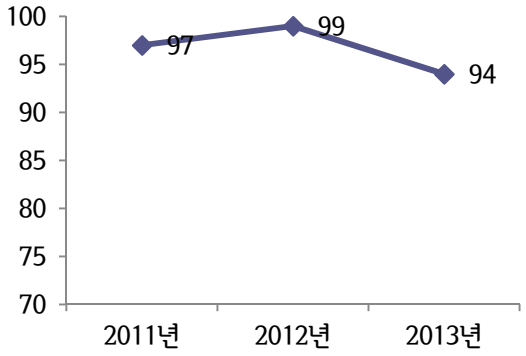
## 5. 평등한 기회 제공하는 채용 제도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전체 직원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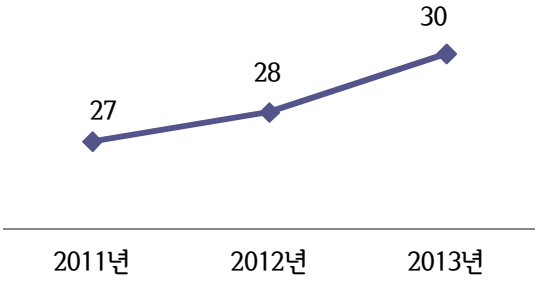

**정규직 비율 (%)**




**고용현황 및 구성**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여성 (명) | 150 | 154 | 176 |
| 여성 비율 (%) | 27 | 28 | 30 |
| 장애우 (명) | 5 | 5 | 4 |
| 국가보훈자 (명) | 5 | 5 | 1 |
| 전체임직원 수 (명) | 548 | 543 | 585 |

**여성직원 비율 (%)**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6. 공정한 인사 평가 제도 운영

• 한겨레신문사는 직원의 역량과 근무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직, 연수나,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입사 후 1년 미만 등) 등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인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개인의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부서장의 1차 평가를 거쳐 상급관리자의 2 ~ 4단계의 평가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자들의 상향평가 등 다면평가 결과도 동일하게 반영돼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됩니다.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평가자 면담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공로상, 노력상, 특종상 등 매달 부문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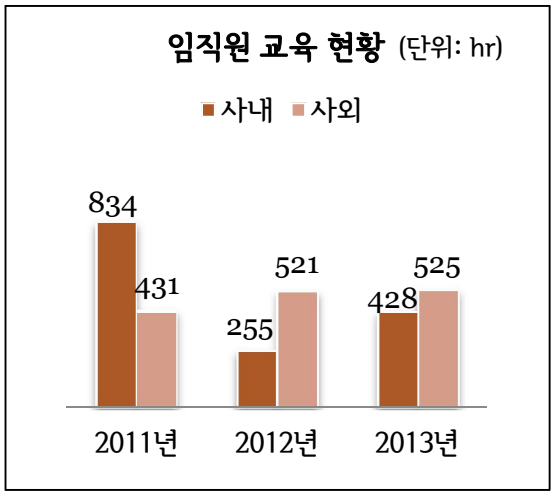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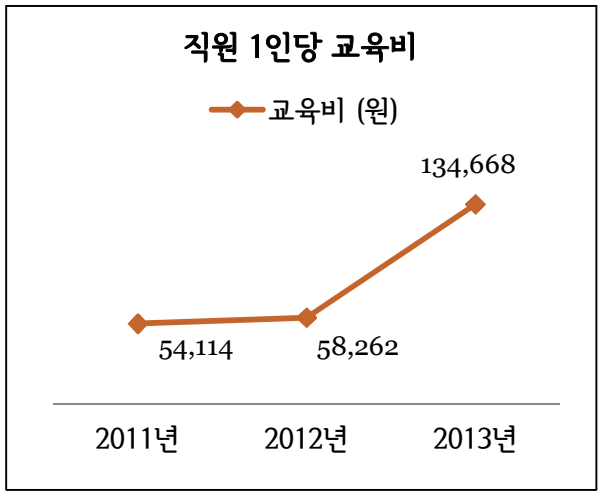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7. 임직원 역량개발 지원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직원 1인당 교육비를 2배 가량 늘려 사내 약 10개 학습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그룹별로 월 20 ~ 25만원 지원하는 등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8.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지원

• 한겨레신문사는 직원 개개인의 일과 삶이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여직원 뿐 아니라 남직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근속기간 5년 단위로 15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식휴가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출산휴가 사용 및 복귀, 근무 현황 (2013년도)**

| 구 분 | 성별 | 2011 | 2012 | 2013 |
|---|---|---|---|---|
| 육아출산휴가 사용 | 남성 | 3명 | 3명 | 4명/392 |
| | 여성 | 6명 | 5명 | 15명/161 |
| 휴가 사용 후 업무복귀율 | 남성 | 100% | 67% | 50% |
| | 여성 | 67% | 100% | 87% |
|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 남성 | 100% | 67% | 100% |
| | 여성 | 67% | 100% | 100% |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9.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휴양시설 운영 지원을 포함해 여가생활,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제도 |
|---|---|
| 여가생활 지원 | • 휴양시설 운영: 전국 휴양시설 이용지원 |
| 주거/생활안정 지원 | •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지원<br>• 생활자금 융자지원: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최고 1,500만원 지원<br>• 근무지 변동에 따른 주거 이전비, 생활위로금 및 교통비 지원 |
| 의료/건강 지원 | • 임직원 본인 건강검진 지원<br>• 건강상담 및 보건관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월1회 방문상담<br>• 퇴직연금제도 시행: 2007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지원 |
| 교육 지원 | •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원 |

# 10대원칙 이행내용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10. 노동 관련 보도활동

• 한겨레신문은 노동조합, 비정규직,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등 노동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노조가입 보장 권고 '모르쇠'(2013.11.25)'

정부, 공무원 단결권·해고자 노조가입 보장 권고 '모르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격차는 벌어지고…"(2013.08.08)'

그들만의 임금 협상…무기계약직 정씨는 "자존심 상했다"

지쳐가는 산재 소송…외로운 투병…'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지쳐가는 산재 소송…외로운 투병…'살아남은 자들의 슬픔'(2013.09.24)'

# 10대원칙 이행내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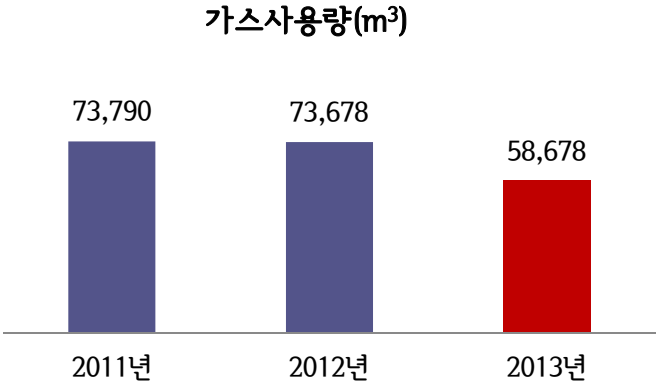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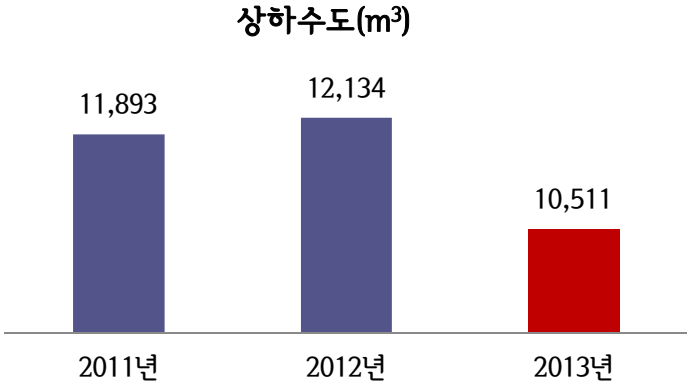
## 1. 가스· 물 절감 노력

• 한겨레신문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별도 구체적 규정은 사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본사 내 가스는 온수기(냉방, 난방) 가동, 윤전실 난방, 겨울철 난방, 윤전실 샤워용 온수, 세면대 온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스사용량은 58,678$m^3$ 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상하수도 시수와 정수로 나눠, 시수는 주로 세면대 등에 사용하고 정수는 기계냉각수, 화장실 좌변기, 소변기 등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활용된 물 사용량이 전체 물 사용량 중 약 75% 를 차지하는 등의 재활용 노력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이 10,511$m^3$로 전년 대비 약 13% 감소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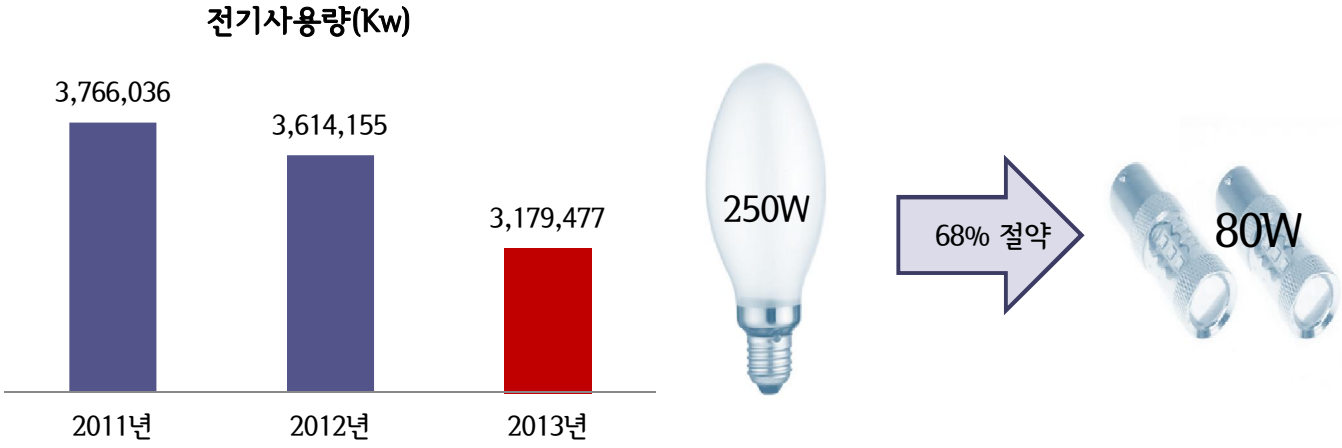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2.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약

• 한겨레신문사는 매년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LED 조명 교체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3년에는 내부 2층 윤전실의 총 36개의 250W 메탈 할라이트 램프를 LED 80W 램프로 교체하여 기존 윤전실 전기사용량 대비 약 68%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서관 주차장 및 동관주차장 조명 82개를 상시 조명에서 움직임이 있을 시에만 점등되는 센서타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3년 전기사용량은 총 3,179,477Kw로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2013년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 원료 사용총량은 17,534톤 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신문 생산과정에서의 폐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쇄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폐지, ps판, 지관 관련우수 재활용업체를 매년 선정하는 등 재활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사적으로 이면지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환경**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3. 에너지 절감 캠페인 후원

• 한겨레신문사는 공공기관 및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포럼 및 캠페인을 후원하여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소요량 감축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에너지캠프 참여한 한·일 청소년들

### "원전 없는 미래 위해 절전!" 10대들의 호소

"절전합시다." 8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 28명이 시민들에게 부채 200여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절전'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후 2시부터 5시에 전기를 아낍시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시민들은 일본이 후쿠시

**'원전 사고' 후쿠시마 학생들도 참여**
**한국 학생들은 원전 위험성 깨달아**
**"원자력 줄이기 대책 필요" 한목소리**

일본 후쿠시마현 등에서 온 일본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 28명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마 원전 사고 이후 강도 높은 절전을 통해 전력 부족을 극복해왔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한빛원전 인근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한·일 청소년 에너지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아키타현·야마가타현·미야기현 등지의 일본 중고교생 8명과 한국의 중고교생 20명이 참석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나의 후쿠시마 이야기'라는 제목의 발표회에서 2011년 3월11일 발생한 원전 사고의 공포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사고 현장에서 60㎞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구마다 아카리(18·여고3)는 누구보다 사고의 기억이 생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실제 경험해 보니 무섭더라.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지만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두 나라 청소년들은 원전의 위험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을 비롯해 원전을 이용하는 나라의 국민들도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끔찍한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고교생 배소정(18)양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일본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고 깜짝 놀랐다. 원전을 줄이려면 절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한·일 청소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일본에선 사라져버린 갯벌을 영광에서 경험하고 즐거워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인 오하라 쓰나키 광주환경운동연합 간사는 "후쿠시마현 청소년들이 원전 사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됐고, 한국 청소년들도 원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행사였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8~9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세계피폭자 사진전도 열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에너지캠프 참여한 한·일 청소년들(2013.08.09)'

# 10대원칙 이행내용



**환경**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4. 환경 관련 보도활동

• 환경경영에 대한 개념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 지역에서 답을 찾다(2013.12.30)'

에너지 위기 시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자연에서 얻어 지역에서 소비
'지속가능' 구현 새 방식 주목

'바이오매스 가스로 발전소 가동(2013.12.30)'

타이 친환경 에너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바이오매스 가스로 1메가와트 발전소 가동

'빗방울 모으고 다시쓰고…서울 '빗물친화도시' 꿈꾸다 (2013.07.15)'

빗방울 모으고 다시쓰고…서울 '빗물친화도시' 꿈꾸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윤리위원회 운영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언론을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과 정성이 모아져 1987년 창간된 한겨레신문사는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회사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임명 후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직책을 수행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사 이동이나, 노동조합의 위원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위원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윤리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행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윤리강령**

한겨레신문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주언론을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과 정성이 모아져 창간된 한겨레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한겨레신문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의 신문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언론활동은 국민의 뜻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며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 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에 한겨레신문 임직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킴으로써 민주 이론을 실천하고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다짐한다.

***— 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수호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문을 만들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3) 우리는 한겨레신문이 특정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사유화 하는 것을 막는다.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겨레신문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

1)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2) 우리는 나라와 민족, 세계의 중대사에 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치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파헤친다.
3)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출처: 한겨레, http://company.hani.co.kr/sp?pname=hankyoreh.index&spname=company_02_04)

## 10대원칙 이행내용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윤리경영 정착 위한 투명한 이사회 운영

• 한겨레신문사는 이사회를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전문적 조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지도록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5명,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활동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 | 2013년 |
|---|---|---|
| 이사회 인원 수 | 사내이사 | 6 |
| | 사외이사 | 5 |
| 이사회 연령별 구성 | 30~49세 이사 | 3 |
| | 50세 이상 이사 | 8 |

### 3. 윤리경영 컨설팅

•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일반 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비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하는 '2013년 동아시아 30'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리적소비 공모전', '한겨레협동조합교육', '외씨버선 협동조합 교육' 등 공모전과 교육 사업을 운영해 시민사회에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 10대원칙 이행내용

인권 | 노동 | 환경 | **반부패**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반부패 관련 보도활동

• 기업 경영진의 재산 부당취득, 횡령, 뇌물 수수 등 부패 근절을 위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 계열 금융사서 (2013.10.04)’

### 효성 총수일가, 계열금융사서 수시로 ‘차명대출’

〈효성캐피탈〉

**금감원 추적 “임원들 명의로…작년말 40여억” 확인**
**차남이름마저 도용…50억대출 ‘불법날인’ 혐의도**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조석래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게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부사장)의 이름으로 본인 모르게 5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키고, 조 변호사의 도장을 멋대로 만들어 불법대출 등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혐의도 드러났다. 효성 총수 일가가 계열 금융사를 사실상 ‘사금고’처럼 악용해온 셈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 총수 일가가 ㈜효성의 고동윤(54) 상무와 최현태(59) 상무를 포함한 회사 임원 여럿의 이름으로 지난해 말 현재 4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 상무 등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대출금이 효성 총수 일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임원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수시로 반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 4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고 상무와 최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인들로 알려져 있다. 효성 관계자는 “월급쟁이들이 연리 9%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면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실제 대출자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3남인 조현상 부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상무와 최 상무는 ㈜효성 주식을 각각 2만1094주, 2만6610주씩 모두 4만7704주(2일 종가기준 32억4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등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적발했다.

또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 명의로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변호사 쪽은 “가족인 효성 총수 일가가 이름을 멋대로 사용해 돈을 빌린, 이른바 ‘도명 대출’로 보인다. 지난해 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은 조 변호사의 승낙 없이 막도장을 만들어, 조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몰래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효성캐피탈이 조 변호사의 도장을 불법 날인한 이사회 의결서는 2005년 이후 올해 2월까지 8년간 167건에 달한다.

▶2면으로 이어짐

곽정수 선임기자, 송경화 기자 jskwak@hani.co.kr

‘차명계좌 23개로 수백억 비자금 굴려(2013.01.23)’

###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23개로 수백억 비자금 굴려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겨레, 내부문건 입수**

**친인척 등 명의…2010년 금감원 적발때보다 큰 규모**
**금지된 자사주 매매에…세 아들에 46억 증여 흔적도**

라응찬(75·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 재직 때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예금과 증권계좌로 은행 돈을 빌려 쓰는가 하면 자사주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차명계좌는 라 전 회장과 아들들 간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관련기사 5면

22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서조직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라응찬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 임기 마지막 해인 1998년부터 지인 2명과 차남의 동업자, 재일동포 주주 4명, 신한증권 임원 출신인 김아무개(69)씨와 그의 친인척 9명 등 모두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8년까지 누적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에서 적발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금감원은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 찾아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 회장에게 3개월 업무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2009년 5월 박아무개 당시 신한금융 업무지원팀장이 작성한 ‘총괄표’(장표)라는 문건을 보면, 라 전 회장이 단지 실명제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한 기록까지 들어 있다.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며 신한금융지주 주식 수만주씩을 사고판 흔적이 눈에 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커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로 은행 대출을 받아 라 전 회장과 아들 계좌에 입금하고 나중에 다른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갚은 기록도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런 우회대출로 이익을 챙겼을 경우 횡령과 배임죄가 적용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한 돈이 46억원에 이른다. 모두 세금 탈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금거래다.

또다른 내부 문건에선 신한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이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에 대비해 라 전 회장의 불법 차명거래를 은폐·조작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는 이런 차명거래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과 박아무개 전 업무지원팀장에게 설명을 들어보려 했으나, 라 전 회장은 “손님이 있으니 나중에 합시다”라며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전 팀장은 지주 홍보실을 통해 “예전에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미 소명을 한 건이다.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고 전해왔다.

박순빈 선임기자, 최혜정 박아름 기자 sbpark@hani.co.kr

### 동양그룹 휘청일때 사주일가 ‘제 몫 챙기기’ 의혹

**이관희씨 1500억 오리온 주식 동양네트웍스 증여 놓고 뒷말**
**“자금압박 시달린 계열사 아닌 수익기반 안정적인 업체 택해 일찌감치 출구전략 준비”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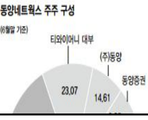
**사주가 아끼는 골프장·저택도 네트웍스로 소유권 옮기고 현회장 자녀, 지분 대거 사들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아끼는 집으로 올해 초에 동양레저에서 동양네트웍스로 소유권을 넘긴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사주 일가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우량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를 중심으로 ‘그룹 해체 이후’를 준비해 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룹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는 와중에 자산매각 등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기보다는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관희의 사재 출연, “손자 밀어주기?” 25일 동양그룹 안팎에선 전날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1500여억원 가치의 …

**동양네트웍스 주주 구성**
(6월말 기준)



• 현재현 회장 6.66
• 현승담(현 회장의 장남) 2.23

조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과거 골프존(스크린골프 업체)에 매각 직전까지 갔으나 이런 이유로 무산된 바도 있다. 골프장에 설치한 수십억원짜리 조형물에 대한 (이 부회장의) 애착도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왜 동양네트웍스인가? 결과적으로 최근 …

‘동양그룹 휘청일 때 (2013.09.26)’

### “이재현회장, 10명 들어갈 비밀금고방 만들어”

**CJ회장 회삿돈 횡령혐의 공판**
**제일제당 전 경리파트장 증언**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3) 씨제이(CJ) 회장의 재판에서 이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 옆에 사람 10명이 들어갈 크기의 ‘은밀한’ 비밀금고방을 만들어 매달 수억원씩 빼돌린 회삿돈을 쌓아놓고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씨제이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출신 이아무개(53)씨와 재무2팀장을 지낸 이아무개(44)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방법과 사용처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씨제이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 전 파트장은 “우리 직원이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 (이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는) 재무2팀에 전달했다. 이 회장에게 보낸 현금의 가짜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재무2팀이 씨제이 본사 14층에 마련된 비밀금고방에 보관했고 이 회장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집어썼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이 회장은 본사 14층 자신의 사무실 옆에 쇠창살과 철제 방화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가로세로 3m 크기의 방으로 된 콘크리트 금고방이 있었다. 가벽 뒤에 숨은 이곳에 접근하려면 열쇠 2개와 리모컨, 비밀번호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금고의 크기는 사람 1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이 구분 없이 섞여 보관됐다. 이 전 재무2팀장이 근무했던 13층과 이 금고방 사이에는 비밀계단이 놓여 있었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사용처와 관련해 이 회장의 카드대금부터 이 회장 고모가 사는 집의 유지보수비 등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장의 고모댁에 쓸 경비는 ‘장충동’으로 일계표(손익계산서)에 표기해두고 자택의 시설유지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쪽은 “금고방에 보관하는 개인자금만 개인용도로 썼을 뿐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이재현회장, 비밀금고방 만들어(2013.12.31)’

# 2013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Tel: 1566-9595
http://www.hani.co.kr/

한겨레 THE HANKYOREH